

01 여는 그림-窓

02 책을 열며

대학가의 군사학 열기를 보며 _ 김홍수

04 특집 SCM

쭉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을 가속화시킬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_ 오혜란

쭉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협상 중단하고

방위비 분담금 전면 재검토해야 _ 이경아

쭉매향리 폐쇄했더니 직도를 달라? _ 오미정

18 현장

쭉강제 철거로도 꺾을 수 없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 _ 한종현

쭉회원들과 함께한 평택 10만 준비위원 모집사업 _ 유한경

26 세상 톺아보기

쭉북핵문제 해결방안은 아주 간단하다 _ 공동길

쭉정부의 용산공원 특별법의 문제점과 올바른 용산기지

반환을 위하여 _ 이형수

쭉포항의 건설노동자는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_ 최명선

41 평화비둘기

정유미 언니, 힘내세요 _ 최성희

44 평화카페

부산영화제 _ 김균열

46 이모저모

<표지사진>

대전충남평통사의 군산미군기지 평화기행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그려넣어
'평화세상' 버튼을 만들어 단 '김재환'군
사진 _ 유한경

<여는 그림>

2006년 10월 10일,
매월 둘째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미대산관 옆 공원에서(가끔은 대추리에서) 열려 온
반미연대집회가 8년째로 접어든 날이다.
평택에서 막 수확한 햅쌀로 빻은 떡을 나누어 먹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더이상 이 집회가 필요없을 날을 상상하며...

글·사진 | 오미정

대학가의 군사학 열기를 보며

평통사 공동대표 김홍수

최근 수년 사이에 삼군 사관학교에나 있을 법한 군사학과들이 일반대학에도 버젓이 개설되고 있다. 현재 4년제 대학 가운데 학부에 군사학과를 둔 곳은 2004년 대전대를 시작으로 경남대, 원광대, 조선대 등이다. 그 해 계룡대에서 열린 군사학과 개설 설명회에는 전국에서 23개 대학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그 후 군사학 분야 학과 개설을 희망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대학에서의 군사학 교육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군사학과 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과 장교 임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졸업 후 군 관련 연구소나 방위산업체 취업이 가능해 인기도 있는 모양이다. 이미 몇몇 대학에서는 군사학 석사과정이 개설되었고 박사과정도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안보 관련 석사학위 과정을 두는 대학원도 증가추세에 있다.

전문대학에서도 군 관련 학과가 속속 개설되고 있다. 군의 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기술 분야의 군사 관련 학과에는 현재 7개 전문대학에서 1,2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총포광학과, 유도탄약과, 특수무기과, 국방물자과, 특수자동차과 같은 학과들에서 공부하고 있다. 특수 기술 분야의 군사학과 외에도 부사관학과를 개설한 대학도 있다. 이 학과들은 학군제휴 협약에 따라 군의 주문식 교육에 의해 운영되며, 인근 부대로부터 교육실습장 및 교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대학가의 군사학 열기는 국가안보 차원에서만 보면 학계와 군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는 현상으로 또는 군사학이 대학사회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학 저 대학에서 취업이나 신입생 충원을 이유로 군사학과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군사학과에서 교육하는 것은 군사력의 개발, 유지 및 운용이 그 핵심적 영역임은 이미 개설된 군사학과와 교과과정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 대학에서의 군사학과 개설은 사관생도와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에까지 군사학 교육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면서도 아무 주저 없이 많은 대학들이 전쟁 관련 일꾼 양성에 나서고 있음을 드러내는 현상이기도 하다.

한국인들은 전쟁의 비극과 참상을 경험했다. 6. 25전쟁 기간 동안 무려 500여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숫자는 유엔군과 중국군이 포함된 것이나 대략 한 두 가족 중 한 사람의 사상자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전쟁은 2차 세계대전, 14세기의 흑사병, 1차 세계대전 다음으로 큰 재난이었고 따라서 한국인들이 겪은 고난과 스트레스도 그 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 전쟁으로 이런 대 참사를 겪은 경험이 있기에 그리고 지금도 남북이 휴전상태로 대결하고 있기에 대학들에서 군사학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안보 차원에서 이해될 수는 있으나 이 대학 저 대학에서 군사학과가 개설되고 있는 것은 대학을 위해서나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나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뼈아픈 전쟁 경험은 안보 차원을 넘어 전세계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평화교육 운동이나 반전운동으로 발전해야 하며 대학사회가 앞서 해야 할 일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군사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민군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민의 안보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일도 필요하겠으나 대학을 안보교육이나 취업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군의 태도나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대학들에서 생존의 돌파구로서 무분별하게 군사학과를 개설하는 것을 크게 우려하는 것이다. 군은 영관급 제대군인에게 교수요원으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취업기회의 확대에 관심이 있는 모양이다. 이런 이유들로 개설된 학과에서 전쟁이나 평화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교육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교육 없이 군사력 증강을 위한 교육과 전쟁 관련 기술교육만을 실시한다면 머지않아 한국대학들은 전쟁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남한에서는 국방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으며 북한에서는 선군정치라는 낯선 말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남과 북에서 국가안보를 군사력에 의존하는 상황이라 안보주의적 군사학 연구도 등장하겠지만, 바로 그 상황 때문에 무력이 아닌 방법으로 통일운동이나 평화운동에 나설 일꾼을 교육하는 학과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대학 학부에 평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평화학이나 그와 유사한 명칭의 학과가 개설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평화운동 단체는 생기고 있으나 학문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평화학 연구의 불모지다. 군사 관련 학과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에서 계속 개설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현상이다.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동맹 장래 연구를 매듭지은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끝나고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한미당국은 그간 향후 50년 동안 적용될 한미동맹의 틀을 마련한다고 공언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사안들은 모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장래 민족의 이익과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다.

SCM 의제중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 비전연구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평가를 들어 본다. 아울러 미공군 공대지 사격훈련장(직도) 문제와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SCM특집의 하나로 다루었다.

-편집자 주-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을 가속화시킬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미군문제팀장 오혜란

● 먼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회의에는 양국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미국 측에서는 태평양사령관, 주한미대사, 주한미군사령관, 국방부, 국무부, NSC 관계자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측 파트너 등 각각 10여명 이상이 참가합니다.

SCM을 보좌하기 위해 산하에 정책검토위, 안보협력위, 군수협력위, 방산기술협력위, 공동성명위원회 등 5개의 실무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분과위는 통상적으로 매년 6월 하순에 열리며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 이전에 의제 선정 및 협상 방향을 상호 검토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CM은 한미양국의 안보 문제에 대한 정책협의,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위협 평가 및 대책 수립, 양국 간 긴밀한 군사협력을 위한 의사 조정 및 전달, 연합방위력 건설 및 운용방안 등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 양국 합참의장을 대표로하는 한미군사위원회의(MCM)를 통해 전략지침과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SCM은 미국이 '안보협의'를 구실로 자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군사전략을 한국정부에 강요하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 SCM에서는 이준 전 국방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의혹을 부추기며 한반도 위기를 부채질하던 럽스펠드 미국방장관의 압력에 굴복해 작전계획 5026과 5027-04의 수립을 위한 전략지침에 합의했습니다. 그 전에도 미국이 대북선제공격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양국의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북한정권 붕괴, 북한군 격멸을 통한 통일여건 조성에 공식합의 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물론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선언에 따른 합의 통일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SCM은 미국이 자국산 무기 도입과 구매를 강요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럽스펠드 국방장관과 미 국방부 관련자들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보잉사의 F-15K의 구매를 이 회의를 통해 강요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국방개혁 2020과 같은 국방정책에 대해서도 간섭합니다. SCM회의 전에도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설명 때문에 국방부 인사가 미국을 방문한 바 있고, 2005년 SCM 공동성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윤광웅 장관은 한국군 국방개혁 2020(안)의 배경과 과정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럽즈펠드 장관은 한국측 국방개혁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이해를 표명’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윤광웅 국방장관과 럽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10월 20일 워싱턴에서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간략히 평가해 주십시오.

이번 SCM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퇴행적 한미동맹의 유지와 확대 강화에 매달리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당면한 민족적 요구와 이익을 저버린 회의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SCM은 북한 핵 실험과 그에 대응한 유엔안보리 제재 및 미국 주도의 대북 PSI 강행, 남북 경제협력 중단 요구 등 한반도 위기가 발전되는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회의는 북한 핵 실험 이후 변화된 정세를 반영하여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을 실현 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에 이른 근본 원인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는 만큼 양 장관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및 핵 선제공격계획의 폐기에 나서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표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핵 프로그램의 폐기 및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복귀’를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지 않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 요구만 했을 뿐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탕자쉬엔 중국 특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며 재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어긋나는 핵 무기 및 프로그램은 보유했던 원인이 미국에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와 함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핵 선제공격 계획의 폐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공동성명의 ‘핵우산을 통한 확장된 억지력 (extended deterrence)’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핵우산 제공과 같은 내용이며 다른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이 ‘핵공격 수단을 확대 제공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공동성명에 반영한 것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구체화한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근거없는 국민기만 행위입니다. 우선 확장억지와 핵우산은 같은 개념입니다.

미국은 핵무기에 의거해 전쟁을 억지한다는 핵억지(nuclear deterrence)전략에 기초해 미 본토에 대한 핵억지와 함께 유럽과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extended deterrence(확장억지)라는 전략을 21세기 안보전략의 축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확장억지는 미국의 동맹국에게 제공하는 핵우산을 의미하며 일본의 핵전문가인 Sugie Eiich도 그의 책 <탈냉전과 군축>에서 ‘핵우산과 확장억지는 동의어다’라고 정식화하고 있습니다.

‘핵우산을 구체화하는 성과’라는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미국은 핵전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수권 차원의 문제로 간주하고 핵전력의 운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다른 나라와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핵우산 제공자인 미국이 “성과인양 얘기하는 것은 헛소리”라며 국방부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논란의 핵심적 문제는 국방부와 합참내 강경파들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에 이른 근본 원인을 도외시 한 채 ‘북한 핵에 대응한 핵전력 강화’로 안보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고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프로그램의 작동 가능성만 높일 뿐입니다.

핵 선제공격 독트린을 천명하고 있는 미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해 왔습니다. 또 북한 핵·미사일·지휘통제체제에 대한 선제정밀 타격을 노린 작전계획 5026과 북한 정권 붕괴 및 북한 군 격멸을 통한 통일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매년 수차례씩 한미연합연습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보수구세력들의 주장을 등에 업은 군부 강경파들의 사고는 동북아지역에서 핵군비경쟁을 불러와 한반도 및 동북아 비핵지대화, 핵 군축 실현에 장애로 될 뿐입니다.

● 언론의 관심에서 뒤로 밀리고 했지만 이번 SCM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한미동맹 장래 문제인데 이와 관련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03년부터 시작된 한미동맹 장래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는 자리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조응하는 동맹 장래를 결정해야할 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서 양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이 ‘양국의 국가이익에 긴요’하다는 점과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점에 합의하여 한미동맹의 유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정전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냉전의 해소와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따라 해소되어야 합니다.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에 합의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해소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국제법적으로 정전체제 관리를 주 임무로 하는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하며,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전제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한미동맹도 해소의 길을 밟아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 공동성명에서 밝힌 한미동맹의 미래와 그 역할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양국의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관계로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고, 한미동맹비전연구 결과-미래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에 대

해 ‘미래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동의’하였습니다.

한미동맹비전연구가 밝힌 한미동맹의 미래는 한미동맹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법치 등의 이름으로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테러, 긴급 재난, 급변사태 등에 개입하는 침략적 성격의 동맹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한국군 파병이 그 전형적 사례입니다. 또한 호혜란 이름으로 대북 PSI에 한국 참가, 평택기지 확장사업의 지속과 직도 공대지 사격장 제공, 반환기지 환경오염 복구비용 한국 부담, 주한미군지원금(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동맹 유지를 위한 한국민의 희생과 비용 부담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동맹의 미래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며 기존의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확대재생산을 의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2007년에도 ‘안보정책구상회의(SPI)의 지속 강화’, ‘동맹의 발전에 따른 SCM 분과위를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의 가속화와 한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에 불과합니다.

● 2003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부터 한미동맹 조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미래 한미동맹 청사진을 구상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인 안보정책구상(SPI)이 출범하면서 이 논의가 본격화되었는데,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장래연구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한미동맹 비전연구와 관련된 논의 경과를 소개해 주십시오.

한미양국은 1990년대 초부터 냉전와해와 남북관계 발전으로 한미동맹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 변경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 포괄동맹으로 전환을 추구해 왔습니다.

1993~1994년 국방연구원-랜드연구소의 공동 연구 : ‘21세기를 지향한 새로운 한미동맹 보고서’에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으며, 1995~1996년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미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실 아태국장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안보대화’에서 밑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1997년 SCM공동성명에서 “한반도내 당면한 위협이 감소된 후에도 민주적 가치와 안보이익을 계속 공유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처음으로 민주적 가치의 공유에서 찾은 바 있습니다.

또 2000~2002년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국장급 대화 :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공동협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2003~2004년 FOTA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지역역할 확대 및 재배치 합의를 바탕으로 2003~2005년 SCM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2004년 SCM에서 전 세계적 테러리즘에 대한 한미양국 간 협력증진의 필요성과 그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미동맹비전연구는 2004년 제36차 SCM에서 윤광웅-럼즈펠드 양국 장관의 지시에 의해 시작되어 2006년 9월 27~28일 제10차 SPI에서 한미 간 공동 연구 결과에 서명, 이번 SCM에 그 결과를 보고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2005년 2월 제1차 SPI회의 직후 한용섭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한미동맹비전 정책연구팀을 구성하여 2005년 12월 ‘한미동맹비전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한미동맹비전연구의 특징과 기존연구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존 연구가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평화공존, 통일단계로 나누고 있음에 비해 동맹비전연구에서는 통일단계가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명기할 경우 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또 615 선언에 따른 자주적 통일을 배제한 채 북한 붕괴와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전제로 미래 한미동맹의 임무와 기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1993~1994년 국방연구원-랜드연구소의 공동 연구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 달성을 사활적 국가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SPI 정책연구팀의 연구에서는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과 북한 민주화 및 북한 체제 전환을 위한 안보 여건 조성’을 국가이익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참여정부가 제시한 국가이익(평화번영과 국가안보, 2004.3, NSC)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 위협 소멸 후 한미동맹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 패권국가의 등장 저지”로 정하여 한미동맹의 대중국 포위동맹화를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 균형자론은 물론 동북아 협력안보체제 구축은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 애초 작전통제권 반환과 관련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합의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공동성명에서 양 국방장관은 ‘한미지휘관계 연구 결과’를 점검하고 ‘작전통제권을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 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한국군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작전통제권 반환은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군사주권 회복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작전통제권 환수의 전향적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2009년 이후로 작전통제권 반환을 미루기로 한 것은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을 계기로 대북 정보감시 및 정밀타격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특히 10월 18일, 한미군사위원회에서 서명된 한미지휘관계 연구 보고서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전/평시군사협조본부(MCC)의 창설과 이를 통한 정보 및 위기관리, 공동연습계획 작성, 해외파병, 상호군수지원협의 등 각 분야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한국방위와 관련된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활한 작전협조를 구실로 한국군 지상군/해군/공군 작전사령부에 미측 요원의 파견과 공중작전의 주도권은 미군이 갖는다고 밝힌 대목에서는 작전통제권 환수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할 뿐입니다.

● 평화운동진영에 한마디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폐기, 압도적 우위의 한미연합군의 핵 및 재래식 전력 감축,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와 대북 과잉전력으로 서의 주한미군의 철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협상 중단하고
방위비 분담금 전면 재검토해야

평화군축팀 이경아

한미 양국은 2007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한미SOFA 5조에 관한 특별조치협정(이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미군주둔경비 지원)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공정한 부담’을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율 50% 이상으로의 인상과 5년 이상 유효기간의 특별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무거운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한미관계의 어떤 분야보다도 그 불평등성이 두드러지는 대미 방위분담의 불평등성을 전면적으로 축소·해소해 나가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한국의 일방적 방위비 분담금 강요하는 협상은 중단되어야

주한미군이 큰 규모로 감축되고 또 한국방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지원역할로 바뀌는 만큼 누가 보더라도 방위분담금이 이전보다 대폭 줄어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경제가 성장했다’느니 ‘미군 및 군속 인건비는 방위분담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느니 하는 억지주장을 펴며 방위분담금의 대폭 인상과 장기간의 협정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올 3월 자신들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미군철수’를 위협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공평한 분담(equitable share)’을 요구하는 등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기 위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불평등한 한미SOFA도 주둔미군 경비 배분 원칙으로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되 모든 미군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한미SOFA의 규정과 원칙을 뒤집고 자기 군대의 운영유지비까지 받아내기 위해 불법적인 특별협정을 강요하는 미국의 행위가 과연 ‘공정한 행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만큼 과중하게 미군주둔 비용을 부담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처럼 시설과 구역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거액의 미군 유지운영비까지 부담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 동맹국 가운데 특별협정을 맺어 미군주둔비용을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미국 국방부의 2003년 『동맹국의 공동방위 기여 보고서』를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미 동맹국 27개국의 전체 ‘비용분담’(cost sharing)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서도 훨씬 더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다.

일본에 비해 비용분담의 절대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경제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부담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일본은 민·공유지와 국유지의 임대료를 직간접적인 미군주둔경비로

평가 받고 카투사 인력지원도 하지 않는 등 우리나라만큼 굴욕적이지 않다.

이에 반해 우리정부는 미 국방부의 비용분담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LPP 협정 이행 비용, 부동산 임대료, 인력지원, 환경정화비용,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비용 등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을 위해 써야할 돈은 특별협정 분담금을 제외하고도 매년 2~3조 원에 이른다. 이는 특별협정 분담금 3~4배가 되는 액수로 이것까지 합치면 미군주둔 경비 분담율 100%가 훨씬 넘으며 절대액도 일본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과중한 부담으로 보나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의 지원역할로의 전환 등의 요인으로 보나 대폭 축소되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방위분담금)을 도리어 늘리려는 미국의 의도는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을 봉으로밖에 간주하지 않는 미국의 오만무례한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불평등성과 부당성을 제기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낮추는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수년 내에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상징인 방위분담금 협정을 폐기하는 데로 나가야 한다.

불법적이며 불평등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해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애초부터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SOFA 5조를 위배하면서 체결된 불법적인 협정이다. 미국은 1974년까지만 해도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했으며 한국은 시설, 토지,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주한미군을 지원하였다. 그 후 해외주둔 미군 경비가 늘어나고 쌍둥이 적자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미국은 ‘공동방위를 위한 비용분담’을 명분으로 주한미군 경비의 한국측 분담을 관철한 이래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다 급기야 1991년 SOFA에 어긋나게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란 것을 만들어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비용을 강요하기에 이른다.

주한미군 규모가 최소 2008년까지 12,500 명이 줄고 미군의 임무가 한국군에 이양되는데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은 비인적 주둔비용 지원이므로 미군 감축과 상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병력과 장비가 감축되는 만큼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수가 줄고 탄약고, 장비 보관소 등의 각종 시설 수요가 줄며 수송·차량구입·미군탄약관리 따위의 군수지원 수요가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또 미 육군소유 재래식 탄약관리, 미 태평양 공군 탄약의 한국 공군기지 저장관리, 미군의 순가락, 밥그릇까지 정비해 주어야 하는 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전쟁예비물자 정비 따위의 군수지원은 진작 폐기되어야 할 굴욕적 불법적인 협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되어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대북방어를 넘어서 동북아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의 패권 장악을 위한 역할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 아시아 태평양 침략군으로 전환된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이유와 근거가 없어졌음을 의미 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불한다는 것은 그 어떤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다.

따라서 미측이 이제까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SOFA 규정에도 위배되는 특별법을 만들어 불법적으로 직접지원 비용을 받아냈다면, 우리 정부는 이제 변화된 정세 속에서 더 이상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불필요함을 미측에 주장하여 관련 협정을 폐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정부가 불법,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폐기하지 못할 경우 본 협정은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는 주한미군 관련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로가 될 뿐이다. 이는 작년 3월 라포트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6억8천만 달러로 적시하고 이를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으로 사용할 뜻을 밝힌 것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미측은 주한미군 관련 경비를 여러 분야로 쪼개 놓고 상황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얽매어 국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우는 협상을 중단해야하며, 미국 정부는 최소한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주한미군 관련 경비 부담까지 지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불평등하고 불법적인 방위비분담 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매향리 폐쇄했더니 직도를 달라?

홍보국 오미정

38차 SCM 공동성명 11항은 다음과 같다

“양 장관은 한·미 공군의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직도 공지사격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럽스펠드 장관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적 노력을 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윤 장관은 주한미군의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연합준비태세를 위한 핵심적인 중요사안임을 인정하였다. 양 장관은 직도 사격장의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한·미 연합전력의 훈련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 매향리 국제폭격장이 폐쇄된 이후 줄기차게 대체사격장을 요구해 온 미국은 이번 공동성명으로 직도사격장을 보장받았다. 지난 9월 21일, 주한 미7공군사령관 게리 트렉슬러가 “공대지 사격장 문제가 30일 이내로 해결되지 않으면 항공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전개해야 할 수도 있다”고 최후통첩을 한 결과이다. 정확히 SCM을 겨냥한 이 발언에 화들짝 놀란 국방부는 SCM전에 WISS 설치 작업을 시작하고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 운운 하며 3000억 규모의 정부 투자를 받기로 하고 국방부의 WISS 설치 작업에 허가를 해줬다.

이에 지난 8월 25일 발족한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직도이전 저지를 위한 군산대책위원회’ 전희남 상임대표를 만나 대책위 활동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WISS : Weapon Impact Scoring Set, 자동채점장비. 공군전투기가 훈련용 모의탄이나 폭탄을 투하했을 때 자동적으로 폭격의 정확도를 점수로 매기는 것이다. 이 장치의 핵심 장비인 카메라는 폭탄이 떨어진 위치를 확인해 표적에 얼마나 접근했는지를 판별해 낸다.

미군은 조종사들이 이 장치가 설치된 사격장에서 연습했을 때만 훈련 성적과 결과를 인정해 인사에 반영한다. 때문에 이미 직도사격장을 미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향리 대체사격장 문제는 직도사격장에 WISS 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진다.

직도와 함께 매향리 대체사격장으로 거론됐던 영월 필승사격장에도 이 장비는 설치되어 있다. 당연히 주한미군은 필승사격장을 한국공군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투쟁으로 미군 훈련비율이 늘어나는 게 저지된 바 있다.

국방부가 설치하려는 WISS 장비는 총 27억원 규모로 채점용 카메라 등이 장착된 40m 높이의 철탑 2개와 25m 높이의 전파수신탑 2개로 알려졌다.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직도이전 저지를 위한 군산대책위원회(이하 직도대책위)’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그동안 ‘군산미군기지확장저지와 직도폭격장 폐쇄를 위한 전북대책위’가 직도사격장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었는데, 국방부가 직도사격장에 WISS를 설치하기위해 군산시에 산지 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군산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시국회의를 열어 직도사격장 문제에 대한 대응 기조를 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4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죠.

직도대책위는 직도사격장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관철하기 위한 군산미공군기지의 강화와 연관이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과 부당성을 부각시키고, 그동안 국방부가 직도를 무단 사용해 왔기에 즉각적인 사격장 폐쇄요구의 입장으로, 직도사격장이 지역발전에도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됨을 시민들에게 알려내어 매향리 국제폭격장의 직도 이전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들은 직도폭격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직도는 1971년부터 공군이 사격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미 35년 동안 지속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삼스런 부분은 없죠. 직도에 사격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군산 미 공군기지를 끼고 있어서 그런지, 미군기지문제에 대해서는 만성화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매향리 폭격장이 폐쇄되고 난 뒤에 매향리를 대체하느니 하는 게 뉴스로 알려지고 하면서 전라북도과 군산시 시민들이 비로소 직도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폭격장 시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로 관광문제나 대중국 교역 문제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때가 2005년 방폐장 문제로 총력 싸움 중이었는데, 직도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방폐장에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모두 직도의 매향리 대체는 안 된다고 했어요. 2006년 8월 현재 군산 시민의 84%가 반대한다고 군산지역 인터넷 언론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직도 가까이 사는 말도 주민들은 어떤가요?

소음피해로 탄원이 많았습니다. 국방부가 최근에야 비행경로를 변경하면서 소음이 일부 줄었지만 실폭탄 투하시 소음은 여전히 엄청나다고 해요.

문제는 어업손실입니다. 원래 직도 근처는 황금어장인데, 직도의 어로 통제구역은 1만 1천 ha로 새만금 매립지의 1만 2천 ha로 비슷합니다. 직도사격장 반경 18km가 안전거리 확보 이유로 어업금지구역으로 묶어 있는 것이죠. 어민들이 불법을 무릅쓰고 직도 주변으로 조업을 나오면 훈련 나온 전투기들이 위협비행을 하거나 해경과 공군에서 순시선이나 헬기를 띄운다고 해요.

게다가 최근 새만금이 매립되면서 이 지역 적조가 무척 심해졌고 거의 모든 어장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치어 방류해봤자 적조 때문에 다 죽는다고.

직도-새만금-군산미공군기지, 딱 봐도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군산기지 바로 앞 새만금 매립지를 미국이 요구하고 있고, 직도는 바로 또 그 앞입니다. 직도사격장 문제와 군산 미군기지 강화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신속기동군화라는 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직도사격장만 가지고 대응하다보면 저들 논리에 말리기 쉽죠. ‘소음피해’, ‘어업손실’ 문제나 줄여보려고 할테니까요.

국방부는 WISS 장비를 설치하고 나면 어업통제구역이 줄어들고 소음도 감소되기 때문에 생활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광고하던데요?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군산시민들은 매항리 주민들이 어떻게 투쟁해왔는지 잘 알고 있어요. WISS 장비가 있던 매항리에 피해가 없었나요? 국방부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매항리를 보면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매항리 전만규 위원장이 직도 집회에 와서 매항리가 직도로 옮겨 가는 줄 알았으면 차라리 매항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할 걸, 정말 미안하다고 했겠나요?

활동하면서 나서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군산은 2005년 방폐장 건으로 인한 피로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군산시민들이 찬성 측과 반대측으로 나뉘져 사람 관계들이 다 깨졌습니다. 특히 군산시 공무원들이 친척이나 동창들을 이용해서 반대측 시민들을 협박하는 등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 사회 여론이 다시 둘로 나뉘지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직도사격장 반대 측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언제 여론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자기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으면 돌아설 수 있는 거죠. 실제 문동신 군산시장도 정부가 3천억원 규모의 각종 현안 사업 지원책을 제시하자 국방부에 산지전용허가를 내 줍니다. 군산시의회가 유감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 직도를 3000억원에 팔아먹었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국가권력과 맞서서 이득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잔인한 추억만 남았지. 그럴수록 조직 대중이 분위기도 잡아주고 해야 하는데... 지역, 부문, 계급, 계층 요구가 다양하게 터져 나오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권력은 폭력적으로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선에 단일하게 집중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됩니다.

국방부가 지역여론 돌려 세우느라 꽤 애쓰고 있다는데요?

지금 국방부는 지역여론을 잡기 위해 총 공세 중입니다. 지역 신문 광고에, 지역 단체 홈페이지 팝업, 현수막으로 거리를 도배하는 등 완전히 물량공세입니다. 직도사격장에 대한 해명자료부터 팜플렛까지 배포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신문들이 국방부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실어놓고 직도사격장 문제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짚을 수 있겠습니까? 쟁점 사항 싹 빼고, 정부 지원액 규모만 가지고 흥정 식으로 보도합니다.

직도 대책위도 결성 이후에 국방부 앞에 가서 집회도 하고, 군산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도 하고, 시내 곳곳에 현수막도 걸지만, 국방부의 물량공세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평화누리 평화누리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518 당시 공수부대에 진압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평화는 전투력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계기가 되었죠. 국경을 뛰어 넘는 사람들의 연대가 평화를 보장할 뿐입니다.

질긴 놈이 승리한다는 것은 평택이나 직도나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할 수도 없죠.

주체인 군산이 끈질기게 싸울 테니, 직도문제를 비롯한 평화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 줬으면 합니다.

강제 철거로도 꺾을 수 없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대추리 도두리 황새울 지킴이 한종현

빈집철거 전 대추리, 도두리

5월 4일 야만적인 대추분교 철거, 황새울 들판에 설치한 철조망, 그리고 그 안에 막사를 친 군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일방적 선포...

절대농지로 지정된 285만평의 평택 평야를 군사시설로 만든 이 사건은 1980년 5월 광주 이후로 처음 일어난 민간인 상대 군사작전이었으며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쿠데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대추리, 도두리 초입에서 경찰의 불법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작정 사람을 막고 신분증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던 응하지 않던 간에 주민이 아니면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비무장지대도 신분증을 제시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8월이 되자 국방부는 본격적으로 빈집철거를 하겠다며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지킴이들은 그에 굴하지 않고, 더욱 더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김장을 위해 배추와 무를 심었고 마을잔치를 열어 투쟁의 의지를 높였습니다. 지킴이들은 철거를 대비하여 매일 대책 회의를 하였습니다. 평화를 지키고 오기성 지킴이의 석방을 위한 ‘지킴이 선언’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전망대’를 만들어 주민들과 지킴이들이 올라가 황새울에 펼쳐진 국방부의 만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제 빈집철거와 그 후

8월 말이 되면서부터 국방부의 강제철거가 피부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철거용역업체 차량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하였습니다. 철거 이틀 전에는 사람이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다가 주민들에게 발각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방부 헬기와 경찰 헬기는 마을과 들판을 저공 비행하며 자신들의 ‘작전’을 위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킴이들은 강제철거로 예정된 9월 11~13일 동안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순찰을 돌았습니다. 12일 새벽엔 군부대의 병력 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줄지어 보이는 차량들의 불빛에 우리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폭풍 전야인 듯 고요한 12일을 보낸 뒤 13일 새벽, 대추리와 도두리 양쪽에서 끝없이 전경버스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0, 40대 정도 세어 보다가 차량 숫자 세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수백에 달하는 경찰차량들은 보기만 해도 긴장과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저렇게 많은 병력을 이겨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을 안에는 주민들과 지킴이들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경찰들은 1만 8천명이나 되었고 철거 용역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집을 부술 포크레인이 있고 우리들을 진압할 봉과 방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맨 몸과 현수막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평화를 외치고 강제철거를 중단하라고 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을 지키고 주민들을 향한 철거협박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지킴이들은 집을 지키기 위해 평화전망대에 쇠사슬로 몸을 묶었습니다. 집집마다 지붕에 올라가 몸을 묶고 평택을 지켜달라는, 강제철거를 중단해달라는 피켓과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지 않은 지킴이들과 주민들은 사방에서 몰려오는 경찰들을 저지하기 위해 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우리의 의지를 일방적인 폭력으로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전망대에 몸을 묶은 지킴이들을 연행하고 주민들과 함께 지키던 지킴이들을 연행하였습니다. 또한 대추리, 도두리로 들어오려는 지킴이들도 연행하였습니다. 철거용역들은 경찰의 비호 아래 집을 하나하나 부수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킴이들이 지붕에 올라가 지키는 집은 차마 부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역들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두 채나 부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철거행위에 부담을 주었고 마을을 지키려는 주민들과 지킴이들의 더욱 거센 분노와 저항을 일으켰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찰들과 용역들이 물러나고 주민들과 지킴이들은 40여 채의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부서진 집들의 잔해는 남았지만 주민들과 지킴이들은 더욱 더 열심히 싸워 끝까지 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강제철거를 하며 주민들에게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협박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주민들의 의지는 오히려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 땅을 절대 줄 수 없다는 마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마을은 곧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배추와 무에 비료와 물을 주었고 고추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서 쉬던 농기계들을 정비하여 철조망 바깥쪽에 있는 벼들을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다시 철거가 들어올지 몰라도 주민들과 지킴이들은 더 이상 공포로 떨면서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벼를 수확 하고, 11월이 되면 배추와 무를 수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을 보내고 다시 봄이 오면 씨를 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924 평화대행진과 구치소 앞 촛불문화제

철거가 끝나고 이주 뒤, 서울 시청 광장에서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평화대행진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버스 두 대에 나누어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손에 손에 ‘미군기지 확장반대’ 깃발을 들고 왔습니다. 청소년들의 연극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평택 싸움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감격하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두 무대로 올라가 대추리, 도두리를 지켜달라고 외쳤습니다.

9월 26일부터는 추석을 앞두고 4일 동안 평택구치소 앞에서 김지태 이장님과 오기성 지킴이의 석방을 위한 촛불문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차츰 날이 쌀늘어져 조금은 추운 감이 있지만 주민들은 여러 차량에 나눠 타고 와서 계속 촛불을 들었습니다. 오기성 지킴이는 면회에서 촛불문화제의 모든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 큰 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지태 이장님도 분명 촛불의 함성을 듣고 많은 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싸움을 하고 있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학교를 부수고 주민대표를 구속시키고 주택강제철거까지 진행한 국방부를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진실되게 주민들에게 다가갔다면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민들은 이제 마지막 싸움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이 원한다고 해서 다 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미군기지 확장을 이제는 온 국민이 나서서 거부해야 합니다. 평성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절절한 목소리들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에 동참해 주십시오.

회원들과 함께한 평택 10만 준비위원 모집사업

대전충남평통사 유한경

대전충남평통사, 평통사 7개 지부 중 준비위원 모집 2위, 모금 2위를 차지하다.^^

9.24 4차 평화대행진을 앞두고 전국적으로는 10만명, 평통사는 5천명을 목표로 준비위원 모집 사업을 벌였다. 정부는 이 대회 전 주택강제철거를 할 예정이었다.(강제철거는 결국 13일 자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많은 국민들이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고 있으며 강제철거가 자행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주민들, 아니 우리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다짐하고 이를 한미당국에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서울, 인천, 부천, 대전충남, 안동, 광주전남, 전북 평통사 7개 지부는 준비위원 모집사업에 돌입하였다. 대전충남평통사는 600명 준비위원 모집 목표를 세우고 캠페인 등 실천에 돌입하였다. 그 결과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395명의 준비위원을 모집하고 226,340원을 모금하여 7개 지부 중 2위를 차지하였다. 3회의 캠페인을 통해 217명과 63,340원을, 나머지는 회원들이 직접 178명의 준비위원을 모집하고 163,000원을 모금한 것이었다.

421명을 모집한 서울평통사에 비해 26명이 부족하여 아깝게 1위 자리를 놓쳤지만 300명 회원의 서울평통사와 130명의 대전충남평통사의 회원대비로 치면 1위라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결과는 회원들이 자신의 일터와 가정에서 서명용지를 지갑에 넣고 다니며 준비위원 모집에 함께 해주었기에 가능했다. 사실 대전충남평통사 회원들은 평택이나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다. 거리상 멀기 때문이기도 하며 기독교인이 많고 교회에 중사하고 있는 회원들이 많아 주로 일요일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러나 참가만 못할 뿐이지 회원들이 평택투쟁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았음이 이번 준비위원 모집사업을 통해 확인되었다. 준비위원 모집에 함께 해줄 것을 만남과 전화를 통해 이야기하자 9.24 대회에 참여는 어렵지만 대회를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준비위원 모집사업에 기꺼이 동참하였다.

여기 회원들의 활약상을 몇 가지 소개 해볼까 한다.

권영준 회원은 부인과 함께 양쪽집안의 일가친척 20명을 준비위원으로 모집하였으며, 오산으로 이사 가기 5일전에는 1살짜리 아이를 업은 부인과 함께 캠페인에 나와 준비위원 모집에 맹활약을 하기도 하였다. 부인 최성희씨는 “아이를 업고 서명을 권유하니깐 그냥 지나치려는 시민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서명에 참여했다. 내가 권유한 시민들은 모두 준비위원에 100% 가입했다.”, “처음 참가해본 캠페인이었는데 뿌듯했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무엇이 권영준 회원으로 하여금 온 가족을 준비위원에 가입토록 하였으며 그의 가족들 또한

기꺼이 준비위원회에 가입하였을까? 무엇이 부인 최성희씨로 하여금 1살짜리 아이까지 업고 나와 1시간동안 거리에서 시민들을 쫓아다니며 준비위원 가입을 권유하도록 만들었을까?

다음은 유동준 운영위원의 캠페인 참가기이다. 사실 유동준 운영위원은 지방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월1회 있는 운영위원회도 참가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이번 준비위원 모집사업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3차례 이루어진 캠페인 중에 두 차례나 참가하여 맹활약을 하였다. 캠페인 첫날에는 하얀바지에 하얀 백구두를 신고 나와 무도회장 홍보하러 나온 사람같다는 놀림을 받기도 하였는데... 어쨌든 눈에 띄는 패션답게(?) 시민들에게 준비위원 가입을 권유할 때도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한 시민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 그 시민이 반응을 보일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그 시민이 결국 가던 걸음을 되돌려 가입을 하고 가게 만드는 것이었다. 항상 점잖게 앉아 묵묵히 회의를 지켜보던 모습만 보아온 나로서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에피소드를 소개하자면 너무 끈질기게 가입을 권유하는 바람에 한 젊은이로부터 “싫다는데 억지로 권유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하며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무엇이 그 점잖은 유동준 운영위원이 한명이라도 놓칠세라 지나가는 시민을 붙들고 준비위원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게 만들었을까? 젊은이의 항의까지 받아가면서 말이다.

유한숙 회원은 8살, 10살짜리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이다. 아침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나면 집 근처 태권도장에 나가 동네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건강교실을 다니고 수요일과 주말이면 교회에 나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뉴스나 신문도 보지 않을 정도로 사회문제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유한숙 회원은 준비위원 모집 소식을 듣고 “평택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쉽게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곧바로 가입용지를 복사하여 태권도장과 교회로 달려가 20명의 준비위원을 모집하였다.

무엇이 평범한 가정주부가 준비위원 모집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만들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정부의 행태가 너무나 반인륜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경찰과 군을 동원해 벼가 자라고 있는 논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포크레인과 용역장패를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하니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어느 누가 반대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이를 돕는 일을 어찌 마다할 수 있겠는가? 준비위원 모집을 권유하는 회원들의 목소리와 노력에는 평택 주민들의 고통,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의지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또한 이런 회원들의 권유를 듣는 시민들과 강제철거 사진을 본 시민들은 반드시 가던 발길을 멈추어야 했던 것이다.

그 외에도 목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손용감 회원은 평택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 같은 얘기를 입이 아플 정도로 여러 번 해야 했다고 하며 35명의 명단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번에 개인으로는 최다 준비위원을 모집한 아산 이주노동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영석 회원은 아산에서 FTA반대 서명 거리 캠페인이 있었는데 때는 이때다 싶어 한쪽에 9.24 준비위원 모집용지를 내놓고 함께 서명을 받아 50명을 모집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는 “더 많이 모집하지 못하고 9월24일 날도 참가하고 싶지만 일 때문에 참가하지 못해 너무 죄송

하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였다.

이미 제작년 평택기지확장반대 서명운동 때 혼자서 300명 서명을 받고, 작년 평택지킴이 모집 때 50명을 모집한 경험이 있는 김지수 회원(대학노조충남대지부장)은 이번에도 농성장이나 각종 회의자리에서 31명의 준비위원을 모집하였다.

어디 그뿐이라, 노래를 장기로 가지고 있는 정한섭 회원은 평택관련 한 촛불행사 때면 한번 마다하지 않고 노래를 불러 참가자들에게 분위기를 돋구었으며, 3차례 캠페인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가해 큰 힘이 되었다.

임수규 운영위원은 마지막 캠페인에 나와 주로 모금운동을 하였는데 차분한 목소리로 시민들에게 모금을 권유하여 3차례 캠페인 중에 가장 많은 모금을 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평택투쟁에 앞장서고 계시는 문정현 신부님의 매제이기도 한 조주형 공동대표는 9월 24일에는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급한 일로 도저히 참석이 어렵다며 모금 10만원을 선뜻 내놓으시기도 하였다.

평택 주민들의 고통을 마음 아파하던 이들,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함을 너무나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했던 이들... 9.24 준비위원 모집은 이들에게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투쟁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이며 기쁨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회원들과 함께 한 여기에 준비위원 모집 2위의 비법이 있었던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방안은 아주 간단하다

평화군축팀 공동길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앞장선 결과 유엔안보리는 광범위한 대북제재를 결의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한 추가적인 대북봉쇄와 제재를 가동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물리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행히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이 핵을 확산하지 않는 이상 외교적 해결을 표명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대화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긴박한 정세가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이 앞장서서 대북제재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특히 선박검색에 나설 경우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이로부터 한반도가 전쟁위기 상황으로 돌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한반도에 배치된 군사력을 볼 때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그 승패를 떠나 우리민족에게는 공멸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전쟁이라는 과국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 전쟁은 그 불씨라도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우리가 봉쇄해야 할 것은 북한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 전쟁이다. 그러자면 현 사태를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쭉핵개발 국가 중 가장 투명한(?) 북한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에 앞서 10월 3일 핵실험계획을 사전에 공표한 바 있다. 이제까지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들 중 첫 핵실험을 사전에 공표한 나라는 없었다. 미국과 소련은 지구 전체를 수십 번도 파괴할 만큼의 핵개발경쟁을 벌이면서도 그들의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은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1974년 첫 핵실험으로 핵보유국이 된 인도는 자국의 핵개발 계획이 미국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국의 군사위성이 인도 상공을 벗어나는 시간에 맞추어 비밀리에 핵실험을 준비하고 실시하였다. 프랑스, 중국 등 다른 핵강국들의 핵개발 역시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북한은 여는 핵개발국가와는 달리 첫 핵실험을 사전에 공표하고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무기급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도 이를 사전에 공표하였다. 2002년 12월, 북한은 미국이 우라늄농축 의혹을 제기하며 북미합의에 따른 중유지원을 중단하자 이제까지 동결해 왔던 핵시설을 해제하고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 대해 여타 핵개발국가들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는데도 말이다.

이렇듯 북한은 여는 핵개발국가와는 달리 일련의 핵프로그램들을 공개하며 핵개발을 추진해 왔다.

쭉투명한 핵개발 목적은 어디에

그렇다면 왜 북한은 일련의 핵프로그램들을 공표하며 개발한 것일까?

북한이 핵보유를 통한 핵강국을 목표로 했다면 핵프로그램들을 공표할 이유가 있었을까?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을 실시한 후 성명을 통해 “미국의 핵위협과 고립압살책동 때문에 부득불 핵무기보유를 증명해 보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주장은 미국의 대북 핵위협과 적대정책으로부터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언제라도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선다면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프로그램들을 공표하며 핵을 개발한 목적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은 핵보유보다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포기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북한의 성명에 대해 진의를 의심하는 나라나 사람이 많겠지만, 북한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적대하고 있고, 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략한 후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본다면 북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노무현대통령도 지난 2004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핵과 미사일은 자위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었다.

쭈북핵문제 해결방안은 아주 간단하다

북한이 핵보유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핵문제의 해결, 즉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한반도가 비핵화로 가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또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방도는 이제까지의 북미합의와 6자회담 공동성명, 남북합의를 준거로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울 것도 없다.

문제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미국의 목적이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는데 있다면 북한과 미국의 목적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호관심사를 가지고 대화하면 되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 미국의 목적이 북한을 붕괴시키는데 있다면, 바로 이로 인해 북핵문제는 발생했기 때문에 북핵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순간 북핵문제를 풀리는 것이다.

정부의 용산공원 특별법의 문제점과 올바른 용산기지 반환을 위하여

미군문제팀 이형수

지난 60여 년간 용산 미군기지(이하 용산기지)는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 주둔이라는 치욕의 상징이었고, 서울시민은 미군주둔으로 인한 온갖 범죄와 환경오염, 교통문제 등의 불편을 감내해왔다. 그런 점에서 용산기지의 반환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서울시민과 국민에게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동안 서울시민과 국민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2008년까지 반환하기로 합의하는데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의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협상 결과로 인해 평택 주민들이 기지 확장에 의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정부 추산만으로도 최소 5~6조원에 달하는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을 우리 국민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전국민적인 경사가 되어야 할 용산기지 반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정부(건설교통부)가 주한미군재배치 비용 충당을 위해 반환되는 용산기지 터의 일부를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과 상업·업무·문화 시설 등 상업 개발을 하겠다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용산 민족·역사공원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용산공원 특별법)을 11월달에 국회에 상정기로 하였다. 만일 용산공원 특별법이 정부의 의도대로 국회에서 강행처리된다면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은 충당할수 있겠지만, 용산에서 시작되는 부동산 투기의 광풍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정부는 공원화 사업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걸림돌인 기지 터의 환경 복원 문제나, 기지 터의 일부를 주한미군이 재사용하고 미 대사관을 신축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공원 특별법의 문제점과 올바른 용산기지 반환의 해법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표-1> 용산기지 현황

구분 및 지역	면적(단위:평)	현재 용도지역
총계	1,202,743	
1. 메인포스트(캠프코이너 포함) <용산구>	240,805	자연녹지지역
2. 사우스포스트(드레곤힐 호텔 포함) <용산구>	573,332	자연녹지지역
3. 유엔사 구역 <용산구>	15,957	3종일반주거지역
4. TMP 구역(수송부) <용산구>	24,344	2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5. 서빙고(CID : 정보부대) <용산구>	1,588	파악 안됨
6. 니블로막사 및 한남빌리지 <용산구>	28,556	1,2종 일반주거지역,공원시설
7. 8군 종교휴양소 <용산구>	6,286	2종 일반주거지역,공원시설
8. 캠프 모스(통신시설 포함) <용산구-남산>		9천평으로 추정 파악 안됨
9. 캠프 킴 <용산구>	14,000	자연녹지지역
10. 극동공병단 <중구 방산동>	13,626	일반상업지역 (일부 중심지미관지구)

- 11. 성남골프장 <송파구 거여동> 281,630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 12. 캠프 그레이 <동작구 대방동> 2,619 3종일반주거지역

쫘용산기지 현황과 정부 계획

용산기지는 좁은 의미에서는 용산구에 위치한 기지를, 넓은 의미에서는 서울시내에 있는 기지를 총칭하는 것이다. 용산구에 위치한 기지로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가 있으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캠프킴·유엔사·수송단·정보대가, 한남동쪽에는 있는 8군 종교휴양소와 한남 빌리지 등까지 포함하여 총 90만평(904,868평)이다. 서울시내에 있는 기지는 용산구에 위치한 기지와 함께 대방동 그레이, 을지로 극동공병단, 거여동에 있는 성남 골프장까지를 포함해서 총 120만평정도가 된다. 하지만 정부는 총 81만평에 달하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의 일부를 포함하여 나머지 부지 모두 현재의 용도를 상향 변경한 후 상업개발을 통해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으로 충당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표-2> 산재기지 활용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종합

변경용도	현용도		용도변경시		
	토지매각시	도입시설	토지매각시 개발시 예상수익(억)	도입시설	개발시 예상수익
(억)	예상수익(억)		예상수익(억)		
유엔사 1,994	제3종일반주거 아파트 3,464	1,994	아파트	3,464	현용도유지
(남산경관유지)					
수송부 4,879	제2종일반주거 아파트 5,225	2,781	저층아파트	3,765	제3종일반주거
(역사문화미관지구)					
니블로막사 2,231	제2종일반주거 현용도유지 2,231	2,231	현용도유지	2,231	현용도유지
(일부 1종일반주거)					
8군종교휴양소 170	제2종일반주거 - 170	170	-	170	현용도유지
(공원시설) (공공용도)					
캠프킴 상복합 7,766	자연녹지지역	1,379	-	1,379	일반상업지역 6,795
(공공용도)					
극동공병단 용도유지	일반상업지역 3,528	3,528	주상복합	5,025	주상복합 5,025
(일부 중심미관지구)					
성남골프장 - 1,574	자연녹지지역 조성원가 1,574	1,574	1,574	골프장	1,574
(개발제한구역)					
가액			평		
합계	13,657		17,608		21,171

쭉용산공원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용산공원 특별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배경은 2005년 4월 국무조정실 산하 주한미군대책단이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작성한 ‘주요 미군 반환부지 활용 및 재원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정확히 알 수 있다. 보고서에는 주한미군재배치 비용 충당을 위해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일부 부지의 개발과 서울지역에 산재한 기지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존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자체의 도시계획사항(용도지역 및 지구 변경 권한) 및 건축 인허가 절차 등을 수반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추진하여 도시계획사항 및 건축 인허가 절차 등을 정부가 직접 시행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공원 특별법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용산공원 특별법 제14조(도시관리계획 의제)는 해당 지자체 장이 행사해야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권한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마음대로 행사하게 하였다. 이는 기지 터의 상업개발을 가능케하는 복합개발지구 조항(제2조)과도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이를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시지가가 498억에 불과한 캠프 킴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 분양하면 7,766억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총 81만평 가운데 부지 5곳의 용도를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를 상향 변경하여 <표-3>에서 보듯이 공원화 사업과는 무관하게 상업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용산공원 특별법은 출발부터가 공원 조성이 주요한 목적이 아니었다. 더욱이 정부의 상업개발의 의지는 정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주변지역에까지 난개발을 가져오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스스로 땅 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표-3> 정부의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부지 개발 계획

‘주요미군 반환부지 활용 및 재원확보 방안’ 보고서 양	면적(평)	용도변경후 면적(평)	지역	용도변경후 부지개발 분
구상연구’2) 보고서				
합계	122,610	17,315억원		?
?	합계			
국제교유업무지구	26,220	4,100억원	캠프킨 건너편	?
?	상업·업무·문화			
복합문화지구	15,940	?	녹사평역 인근	?
?	문화			
도심형주거복합지구	26,340	13,215억원	국방부 남서쪽	?
?	문화			
개발유보지구	54,110	?	한남뉴타운 인접지역	
?	?	상업·문화		

시설

쭉정부의 끝간데 없는 거짓말과 언론 플레이...

정부는 지금까지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총 81만평만큼은 공원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부지 5곳을 상업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미국 당국과 이미 2004년, 2005년에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81만평에 주한미군의 잔류 부지 제공과 미 대사관 신축을 합의했다. 2004년 12월 국회에서 비준된 용산기지 이전협정 이행합의서(IA) 제4항 바 (4)~(5)에 따르면 드레곤 힐 호텔과 캠프 모스에 있는 통신시설, 헬기장 유지를 위해 한국 정부는 이에 따르는 시설과 부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행합의서(IA)상에는 구체적인 시설과 부지의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한미군이 이를 악용하여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까지는 2만5천평의 잔류부대 부지와 1만 7138평에 달하는 헬기장이 반환되는 사우스포스트 부지에 그대로 남게 되어 있다. 또한 지난 2005년 7월 한미당국은 '주한 미대사관 관련 건물 및 부지의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메인포스트 부지 2만4천평에 미국 대사관을 이전키로 합의하였다. 결국 이것만을 합쳐도 정부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부지의 총 6만 6천평 가량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이 잔류할 드레곤 힐 호텔 주변은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의 정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만일 공원이 조성된다면 정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주한미군 잔류 부지의 경우는 국방부 부지하고도 떨어져 있어 공원의 '고립된 섬'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현재 국방부는 국방부와 주한미군 잔류부대 부지를 연결시켜야 한다며 5만7천평에 달하는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정부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부지 총 81만평 중 총 12만 2천평(3) 주한미군 잔류와 미국 대사관 신축, 국방부 요구 부지로 총 12만 2천평이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부지 전체를 공원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국무조정실 산하 주한미군대책단이 2005년 4월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에 용역을 줘 작성한 '주요 미군반환부지 활용 및 재원확보 방안' 보고서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쭉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올바른 해법.. 용산공원 특별법 철회시켜야

현재 용산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서울시민의 바람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공원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실제로 용산기지 터의 환경을 원 상태로 회복하고 치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반환된 유엔사(유엔컴파운드), 대방 그레이 등을 제외하고는 환경오염 조사는 커녕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환경오염 치유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만일 지난 60여년간 주한미군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면 공원화 사업은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를 비롯한 서울시내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는커녕 도리어 주한미군재배치 비용 충당을 위해 용산공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국내 군부대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부산 육군 구 2정비창(약3만4천평) 사건은 환경오염의 결과가 공원화 사업에 얼마만큼 막대한 영향을 주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52년부터 95년 12월까지 약 43년간 부산 문현동에 위치했던 구 2정비

창을 사용하다 이전을 하였으나 97년 10월경 폐유·폐기물이 대거 발견되어,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2000년 8월~2003년 8월까지 3년간 122억을 들여 치유를 하였다. 이처럼 토양오염의 결과는 막대한 비용과 치유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04년 4월 환경부가 작성한 대외비 문서인 ‘환경 오염 및 복원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81만평에 달하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중 60%만 공동조사하고, 이 중 2만4천여평만 오염되어도 토양오염 치유를 위해 931억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이 보고서가 토양오염 치유만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 제거와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계산한다면 용산기지 오염 치유 비용만으로도 수천억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자료에 비춰볼 때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81만평을 포함하여 120만평에 달하는 서울시내 미군기지의 치유 기간과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지난 2000년 7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의 기름 유출로 인해 녹사평역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녹사평역 지하수 오염이 치유되기는커녕 현재 서울시가 임시 치유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주한미군이 기름 오염원을 완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사평역 지하수에서 기름이 계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4년 세계일보 취재팀은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내에 기름저장탱크나 배관시설 노후로 8곳에서 1998년부터(주한미군 자료에 따르면) 기름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기름 유출 지역은 기지내 메인포스트의 보일러실 근처와 사우스포스트의 커미서리(쇼펄물), 초등학교, 보충대, 대령 관사 인근 등 8곳이었다. 더욱이 유엔사(유엔컴파운드)와 대방 그레이도 한국 환경법이 정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되었다. 따라서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를 비롯한 서울시내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철저히 조사해서 치유 비용과 기간을 산정하고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부담토록 하는 것이야 말로 무엇보다 선차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정부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밝히고 있지 않다. 도리어 용산공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후에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정부가 공원 면적은 어떻게 되고, 어떠한 공원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서울시민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용산공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용산공원 특별법을 철회시키고 용산기지에 대한 민관합동(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 참여) 환경오염 조사와 치유비용·기간 파악→주한미군 치유비용 부담→민관합동 용산공원 및 주변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작성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쭉나가며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주장을 흔쾌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를 제외한 서울시내 미군기지는 상업개발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정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민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도로를 사이에 둔 캠프킴·유엔사·수송대·정보단 등 총 87만여평은 전면 공원화하고, 그밖의 대방 그레이, 을지로 극동공병단, 성남골프장 등도 공공적인 용도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부지를 상업개발하여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나 부동산투기와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점에서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업의 수혜자는 일반 서민이 아닌 땅

부자들과 부동산 투기꾼, 개발사업자라는 점은 판교신도시를 비롯한 수많은 개발 사업에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재배치 비용 문제를 다른 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산기지 이전협정 및 LPP(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에 대해 재논의를 해야한다. 원래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재배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아시아·태평양 신속 기동군화)를 목표로 한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였다. 따라서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부가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협상을 진행하여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최소 5~6조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용산협정과 LPP협정에는 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한미군에게 백지수표를 준 꼴’이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협상을 잘못했다는 점에서 비용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주한미군재배치 마스터플랜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비용의 규모와 내용이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힘을 모아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야할 것이다. 또한 용산협정 및 LPP협정의 전면 재협상은 주한미군재배치 비용 문제와 평택기지의 확장으로 인해 수십년간 농사만을 업으로 삼았던 평택 주민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뿐 아니라 반환되는 용산기지 내에 주한미군 잔류를 막고,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미국이 부담토록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용산기지 반환은 후대를 위해 총 87만평에 달하는 부지를 아름다운 공원으로 물려주는 사업으로, 서울시민과 국민에게는 다시 찾기 어려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삭막한 도시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살아 숨쉴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로 얼룩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용산공원 특별법을 철회시키는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될 것이다.

포항의 건설노동자는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명선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이 7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여, 7월 13일에는 포스코 농성을 진행 하고, 농성 해산이후에도 82일간의 파업을 전개했다, 그 와중에 경찰폭력으로 하중근 열사가 돌아가시고, 68명의 구속자가 발생했고, 검찰은 58명 농성자 전원에게 유죄를 구형하고, 이지경 위원장의 3년 6개월 등 27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아직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진행 중”이다. 혹자는 임 단협 합의를 하고 현장으로 복귀한 마당에 무슨 투쟁이 진행형이냐고 말하겠지만, 일용직 고용형태를 갖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경우 현장으로의 복귀 자체가 투쟁일 수밖에 없고,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오히려 노사간의 투쟁이 본격화 된다. 그리고 아직도 하중근 열사 투쟁은 지속되고 있다.

1. 포항지역건설노동자는 왜 포스코로 간 것인가?

7월 13일 포항지역 건설노동조합 조합원 3,000여명이 포항의 포스코 본사를 점거 농성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발했다. “직원을 감금했다.” “포스코 본사 점거로 하루 500억의 손실이 발생한다.” “국가신인도가 추락한다”등 허황된 보도들이 터져 나왔다. 그야말로 “건설노가다가 감히 포스코 거기가 어디라고 갔는가”는 식이었다. 여야 보수정당과 보수언론들은 “생떼쓰기 농성, 노사문제가 아닌 치안문제, 장마에 웬 파업”등 독설을 뽐내면서 “당장 진압하라”고 난리를 쳤고, 한명숙 총리와 청와대까지 나서서 강제진압을 운운했다. 결국 포항지역건설노동자들은 농성 9일 만인 7월 21일에 자진해산 했다.

그러나 9일간의 농성 와중에 ‘도대체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왜 포스코로 갔는가?’에 대한 이유나 진상규명은 언론에서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농성해산이후에야 건설노동자들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한 실상이 일부 보도되어 건설노동자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과 해법 필요를 생색내기로 역설했으나, 그 역시도 포스코가 중심적인 분석 대상은 아니었다. 결국 분석 보도라고 내 놓은 것도,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원인은 있지만, 포스코는 죄가 없고, 건설노동자는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노동조건 악화를 포스코에 생떼를 써서 해결하려 했다”는 식의 보도 태도로 전화된 것뿐이었다.

그렇다면 포항지역건설노동자는 왜 포스코로 간 것인가?

첫째는 포스코가 하청 비정규 노동자인 건설노동자의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적으로 파탄시켜 왔을 뿐 아니라, 합법적인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불법 대체근로 투입의 당사자이자, 최종적인 지휘자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건설산업의 구조와 달리 플랜트 현장의 경우, 발주처-원청-하청-건설노동자라는 하도급 구조에서 발주처는 원청과 동일한 아니 오히려 더욱더 막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

포항지역 건설노동자가 노동을 하는 포항제철소는 하청 전문건설업체도 원청 포스코 건설도 아닌 바로 발주처인 포스코의 현장이다. 포스코의 포항제철소는 금속으로 분류되는 철강생산 파트가 있고 건설로 분류되는 공장신설과 설비 보수 분야가 있고, 이는 포스코의 한 현장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에 포스코 현장의 출입, 공사단가, 노동시간, 화장실, 휴게실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조건은 포스코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다. 지난 2004년 파업 투쟁에서도 포스코는 포항지역건설노조 간부의 출입을 금지하여 포항지역건설노조가 하청 전문건설업체와 맺은 노조활동 보장의 단협을 무력화한 전례가 있다.

2006년 포항지역건설노조는 하청 전문건설업체와 임 단협 교섭을 진행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법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대체인력 투입계획서를 하청 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출입증 발급과 통근 차량이라는 발주처의 권한을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으로 파업을 무력화 시킨 것이다. 또한, 후에 발견된 포스코 내부 문건에 의하면 포스코가 직접 포항시장, 언론, 국회의원들을 만나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 대책을 수립하고 총괄 지휘했다. 포스코에서 직접 작성한 내부 자료에는 하청업체와 직원을 동원하여 포항건설노조를 고발하고,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공격 여론을 조성하고,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단협 해지를 통보하는 등의 단계별 전략과 노조 무력화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이 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전략은 그대로 실행되었다.

7월 11일 서울 포스코 본사가 임 단협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한 약속은 이틀 후 13일 포스코 통근 버스를 이용한 불법 대체인력 투입으로 완전 휴지조각이 되었다. 포항지역건설노조는 포스코 정문 앞에서 불법적인 대체인력 저지 투쟁을 하다가 경찰에게 밀려 나왔고, 조합원들은 포스코에 항의 방문을 하게 된다. 그러나, 포스코는 사과는커녕 언론을 동원하여 포스코가 노동자들에 의해 점거되었다고 대대적인 보도를 해댔다. 결국 14일까지 본사 앞 잔디밭과 포스코 로비 등에 있던 조합원들은 전국에서 투입된 공권력에 본격적인 포스코 농성을 진행하게 된다. 어찌 보면 포항지역건설노동자들의 포스코 농성은 우발적인 농성 투쟁이었으나, 포스코는 수개월전부터 계획적으로 포항지역건설노조 죽이기를 진행하고 있었다.

둘째는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주처인 포스코가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지는 산업에서 발주처와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유력한 당사자가 된다. 포스코는 2000년 이전에는 공기업이었다. 공기업으로서 설계가의 98% 선에서 발주를 해왔고, 원청에서 하청으로 내려가는 도급금액이 85%를 보장해야 하는 기준이 적용되는 기업이었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에 포스코는 공사자체의 성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설계가의 77% 선에서 발주를 했다, 그리고, 그룹계열사인 포스코 건설에 거의 수의계약처럼 공사를 넘겼고 이 과정에서 포스코 건설은 15% - 20% 선의 이윤을 챙기고 하청으로 넘긴다. 이러한 다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공사단계에서는 설계가의 40% 미만으로 책정된 공사비를 갖고 공사를 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다단계 구조에서 공사비가 잠식되는 건설공사에서 포스코가 발주 금액 자체를 하향시킨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포스코 노동자들은 전국에서 동일한 직종의 평균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 같은 공사를 해도 여수나 울산보다 30%의 임금이 낮고, 같은 지역내에서도 다른 발주처 공사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다단계 구조에서 이미 저가로

공사를 받은 하청업체들은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에 “낮은 공사비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아예 공사를 포기하겠다”며 나왔다.

임금뿐 아니라 해고에 있어서도 포스코는 출입증 발급이라는 미명하에 채용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이번에도 포항의 하청업체와 노동조합이 임 단협을 합의하고 현장 복귀를 했지만 포스코는 90명을 포스코 영구 출입 금지자로 선정했다. 올해 봄에는 광양의 포스코 현장에서 직업병이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선임한 의사가 역학조사를 하러 방문했으나, 포스코가 출입을 일시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광양에서는 건설노조가 하청과 산업안전교육을 하는 것을 임 단협으로 체결했다 그러나, 포스코에서 노조간부 출입을 금지해서 포스코 정문을 사이에 두고 2천명의 조합원은 담장 안에서 노조간부는 담장 바깥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것을 놓고도 포스코는 건설노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발주처 일뿐 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포스코 현장에서 일해 온 포항지역건설노동자들을 과연 누가 실질적인 주인인가 라는 것을 십수년의 노동에서 온 몸으로 체득하고 있다. 현장을 단 한번도 와보지 않은 정부, 정치인. 언론만이 포스코의 발주처일 뿐이라는 주장에 헛갈려 하고 있을 뿐이다. 아니 실제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포스코를 가려주고 싶었던 욕구가 가장 크게 작동했을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의 선두주자이자 외국자본이 6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포스코. 파이넥스라는 신공법과 윤리경영으로 가장한 포스코의 환영 속에 포항지역의 건설노동자가 어떻게 일하고 죽어가는지는 철저하게 은폐되고 짓밟혀 졌다.

셋째, 포항지역건설노동자들의 임 단협 요구는 포스코가 실질적인 해결의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올해 포항지역건설노조의 단협 요구의 핵심은 ‘8시간 노동과 주5일 토요일 유급화, 시공참여 계약 폐지,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 중단’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하나 하나가 포스코와 직결될 수 밖에 없다.

주 5일제 토요일 유급화는 건설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생존권적인 요구이다. 2006년 7월부터 주5일제 적용대상이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포항의 전문건설업체들은 모두가 적용대상이 된다. 더욱이 포스코는 2005년부터 이미 부분적으로 주 5일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장시간의 육체노동을 하는 업종이다. 어찌 보면 그 어떤 직종보다 주 5일제가 절실히 필요한 업종이다, 그러나, 일용직 고용이기에 임금보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주 5일제 실시로 인해 30% 이상의 임금 삭감이 오게 된다. 그러기에 건설산업과 같은 도급 구조에서 발주처가 주 5일제 실시로 인한 비용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는 지불능력이 없다. 이미 공사계약을 하면서 공사단가를 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주 5일제 적용대상이 되면 공사기간과 비용상승을 다시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 회계예규가 제정되기도 했다. 결국 주 5일제 실시와 토요일유급화는 발주처의 계약조건 변경이 핵심적인 해결책인 것이다.

주요한 요구중의 하나였던 시공참여 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포스코 현장에서 목공철근분회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과 시공참여계약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단협거부와 해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과정은 최종적으로 발주처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고, 발주처에게 총괄적인 관리 감독 권한이 있다. 포스코 현장에서의 불법 다단

계 하도급과 그로인한 열악한 노동조건 또한 결국 발주처인 포스코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

외국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2005년 여수산단의 34개 공장장협의회에서 노조무력화의 공작으로 검토되었고, 2006년 3월 실제 투입 추진 문건이 발견되었다. 여수산단에서의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GS 칼텍스가 여수시장을 직접 면담하기도 했다. 포스코에서도 이후 발견된 내부 문건에서 노조무력화의 방안으로 외국인력 도입이 검토되었다. 결국 노조파괴공작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포스코가 직접 개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2. 하중근 열사여! 열사여!

7월 13일 포스코 농성이 진행되면서 단전, 단수와 음식물 공급이 중단되었다. 이에 가족들은 “밥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냐”며 울부짖었고, 7월 16일 포스코 농성자에게 인권을 보장하고, 강제진압을 하지 말라는 합법 평화집회가 열렸다. 그러나, 경찰은 맨몸의 조합원들과 가족들에게 방패와 곤봉과 소화기를 휘둘러 대는 진압을 감행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 진행된 집회에 소화기를 연막탄처럼 뿌려대며 기습 진압을 했고, 하중근 열사는 머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부러진 채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결국 하중근 열사는 16일간을 뇌사상태로 있다가 8월 1일 결국 유명을 달리 했다.

포항에서 태어나 포스코 현장에서 십여 년을 일하던 건설노동자가 평화집회에서 경찰에게 맞아 죽은 것이다. 7월 16일 당시에만 16명의 조합원이 방패에 얼굴을 가격 당했고, 넘어진 조합원의 손이 방패에 찍혔다. 7월 19일에는 농성 조합원의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되었다. 임산부임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배를 걷어차여 유산을 한 조합원가족은 경찰의 무마용 협박과 회유로 지금껏 고통받고 있다. 경찰의 폭력은 하중근 열사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8월 4일 집회에서는 살인적인 물대포를 동원해서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각막이 파열되고, 허리와 머리 부상이 속출했다. 8월 9일 집회에서는 야간까지 계속된 경찰의 진압이 시민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사태로 변졌다.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포항으로 가는 전남동부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밤새 막혔고, 여수건설노조와 울산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집회 참가 차량도 막혔다. 포항투쟁과정에서 부상자만 300여명이 넘게 발생했다.

그러나, 하중근 열사를 때려죽인 경찰은 자기들 스스로가 수사본부를 차려 수사를 진행했다. 유족들의 부검 결과 공개의 요구도 거부하고, 부검결과와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대구에서 진행하면서, 기자들과 유족들이 기자 브리핑장의 출입조차 막았다.

심지어 경찰은 하중근 열사의 사망에 조시를 썼던 시인조차 소환장을 발부하고,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과 건설연맹 남궁현 위원장에게도 소환장을 5차례-7차례 발부했으며, 집회에서 사회를 본 건설연맹 유기수 사무처장과 방송차량에서 취재를 하고 있던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 채근식 편집국장까지도 구속했다. 그리고 포항건설노조 간부 전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그야말로 포항지역건설노조 간부와 민주노총 간부 싸늘이를 하고 있다.

하중근 열사를 비롯한 임산부 폭력,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서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포항공대위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했고, 현재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화문 열린공원에서는 진상 규명 농성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3. 66명 구속 27명 실형선고, 16억 손해소와 90명 포스코 출입금지. 참여정부 초유의 탄압에도 건설노동자가 계속해서 끝까지 싸우는 이유는?

포스코 농성 자진해산 후에 언론은 일제히 “18년 포항지역건설노조 와해”로 보도했다. 그러나, 농성 자진해산이후 58명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포항지역건설노조 조합원 2,500명은 다시 모였고 파업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농성투쟁으로 지도부가 전원 구속된 이후 2차 지도부를 구성했고, 2차 지도부가 전원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다시 3차 지도부를 구성했다, 현재 포항지역건설노조는 4차 지도부를 구성해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사상초유의 구속과 실형선고, 포스코의 16억여원의 손해소송과 90명의 포스코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나, 포항지역건설노조는 현장복귀 투쟁과 하 중근 열사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2,000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이 끈질긴 투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이 검찰, 경찰, 정치권, 언론을 총동원한 고립작전과 용단폭격에도 흠어지지 않고 투쟁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건설노동자의 한과 꿈이 오로지 노동조합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포스코 농성에는 70살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끝까지 농성 투쟁을 진행했다. 단전과 단수에 컵라면과 초코파이로 버티면서 건설노동자들은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절절히 외쳤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7시부터 10시간을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만성적인 임금체불, 400여명 당 1개꼴인 화장실. 식당도 없이 먼지구덩이에서 빗물에 도시락밥 말아 먹는 현실, 휴게실이 없어 현장 여기저기서 쓰러져 쪽잠을 자고, 하루에도 몇 명씩 죽고 다치는 죽음의 건설현장...

복마전 같이 얽히고설킨 다단계 도급 구조의 건설현장에서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건설노동자의 삶을 이제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후배 건설노동자에게 이런 현장을 그대로 이어 줄 수는 없다는 50대 건설노동자의 한이 서려있는 투쟁이 바로 포항지역건설노동자의 투쟁이고, 모든 건설노동자의 투쟁이다.

정부도 자본도 언론도 내팽개쳐 두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삶은 건설노동자 스스로 모여 투쟁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난 18년간의 포항건설노조 역사에서 확인된다. 정부도 건설현장의 관행이라며 포기한 다단계 하도급을 현장에서 추방하기 시작한 것도 노동조합이요, 노동부도 외면한 건설노동자의 주차수당, 초과근로수당, 부당해고 금지를 현장에서 시작한 것도 노동조합이었다. 살인적인 건설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한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건설노동자 스스로의 투쟁과 노동조합이었다.

포항지역건설노동자는 파업이 종료되었음에도 고용을 이래저래 회피하고 있는 건설사업주들에 대한 강력한 현장 복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하 중근 열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농성과 투쟁도 지속할 것이다.

자본과 정권의 극단적인 탄압은 지속되었지만 그러나 결코 건설노동자의 한과 꿈이 서린 투쟁을 꺾을 수 없다. 오히려 건설노동자의 투쟁은 생존권의 파탄에 몰려 메마를 대로 메말라진 건설현장에 들불처럼 번져 나갈 것이다.

정유미 언니, 힘내세요.

뉴욕, 미술인 최성희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350만 농민들의 주권 사수를 위하여, 7천만 겨레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묵묵히 피땀 흘려 일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350만 농민들의 주권 사수를 위하여, 7천만 겨레의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옆에 있는 농민 대표의 팔꿈치 주위에 그제야 유미 언니는 자신이 영어로 번역해야 할 것을 깜박 잊고 한국말로 그의 말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았다. 사람들이 웃고 언니도 웃고. 언니의 해맑으면서도 넉넉한 웃음이 다큐멘터리 작가 수 해리스의 비디오를 통해 흘러 나왔다. 그녀는 언니의 한때의 룸메이트이자 절친한 친구인 미국 운동가다.

2006년 6월 초 미국 수도 워싱턴의 세계은행 앞에서 많은 한국 활동 단체 대표들, 교민들, 미국 운동가들의 한-미 FTA 반대 시위가 뜨거웠을 적 일이다.

2006년 10월 7일,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난 지금, 국제 행동위원회, 뉴욕재미 공동체 운동 단체인 노동돌 등 언니의 동지, 친구들은 맨하탄의 작은 공동체 교회에서 청주에서 투병 중인 언니의 암 치료 기금을 위한 행사를 벌였다.

언니 자신도, 사람들도 아무도 6월에는 언니가 그렇게 큰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자주 보진 못했지만 6월에 만났을 때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기까지 했었다. 인권학을 공부한다고, 무척 바쁘다고 했다. 나는 늘 그랬던 것처럼 언니가 너무나 든든하고 고마웠다. 2001년 언니가 Korea Truth Commission의 이름으로 국제 행동 위원회 동지들과 함께 노근리 사건 등 미국의 한국전쟁 중 범죄 행위를 조사하여 두툼한 책자를 펴낸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을 계기로 언니를 알게 되었다. 언니가 인권학을 열심히 공부하여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부당한 인권 시비를 박살내길 바랐다. 그리고 언니는 실제로 지배언론의 개입으로 혼란스러운 나와 사람들의 머리를 두들겨 깨웠다. NED(National Endowment Democracy)의 정체를 국제 행동 위원회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주의시켰다.

잔약해 보이는데도 몇 년을 끈끈하게 거의 홀로 국제 행동 위원회에서 한국의 자주 평화 통일 투쟁을 국제화시키는 데 공헌한 언니의 존재가 없는 국제 행동 위원회, 재미운동은 생각할 수 없다. FTA 시위에 참가한 모든 사람은 공감하리라. 사람들의 뜨거운 애정과 감사어린 박수를 받으며, 언니는 세월과 함께 넉넉해져가는 웃음으로 사람들과 워싱턴에서 작별했다. 곧 한국을 방문한다 하였고 아무도 그것이 1년 이상 언니를 보지 못할 것임을 언니도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가. 몸이 좀 부풀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이미 몸의 상당 부분에 퍼져간 위암 때문이었음을... 기금 행사에서 터지려는 울음을 겨우 참으며 언니의 병과 치료 상황을 상세하게 알리는 언니의 남자친구 차니를 통해서 진단이전부터 언니가 매일 아침마다 소화고통으로 시달려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어쩔, 그렇게 아무 내색도 없이... 나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실감이 안 난다.

기금 행사에서 국제 행동 위원회 대표인 사라 플랜더를 비롯, 많은 동지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언니를 애정으로 떠올리고 노뚝돌 친구들이 “바위처럼”을 힘차게 불러 주었다. 헤더 등은 언니를 통해 알게 된 광주항쟁을 가슴 뭉클하게 노래로 불렀고 청소년 운동 단체의 미아는 “바람에 들려오는 대답”을 서정적으로 들려주었다. 유고 연대 투쟁을 통해 언니를 안 음악가 밀로스의 쩡한 장난감 피아노 연주가 있었다. 필리핀 민다나오 출신의 무슬림 여성 운동가는 언니와의 한 대화를 이렇게 기억했다.

“몇 년 전 내가 한 회담에서 민다나오의 미국에 의한 민중 학살리पोर्ट를 읽으며 울음을 중단할 수 없었을 때 같은 판넬에 앉았던 유미가 말했다. ‘울어, 역사는 그렇게 읽혀져야 하는 거야’라고.”

역사는 눈물로서 읽어야 함을 일깨우는 사람. 그런 깊고 넓은 영혼의 소유자였기에 그렇게 몇 년을 곳곳하게 버틸 수 있었던가. 항상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 나는 유미 언니가 거의 온 몸으로 낫선 땅 미국에서 한국의 고난과 투쟁을 껴안다시피 하며 살아왔던 짧지 않은 세월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처음 만났을 땐 강하지만 좀 차가워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언니를 강한 규율과 인내심으로 뭉친, 주위의 변화에 관계없이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항상 일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떠올렸다. 나는 ‘염소자리 생일이야. 염소자리’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언제부턴가 언니는 친근한 사람이었다. 나는 한국의 투쟁을 다룬 모든 행사에서 언니에게 항상 모든 책임을 가볍게 떠 넘겼었다. 언니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반석이었고 나는 언니 주위를 장난꾸러기 공기처럼 떠돌아다닐 수 있었다. 언니가 없는 지금, 믿고 기댈 반석이 없는 지금, 이 혼란과 당황스러움을 어디에 하소연 할 것인가.

사라 플랜더는 언니를 통해 사사로운 감정으로 분열되었던 동지들이 다시 하나로 모일 수 있었음을 일깨웠고 폴 등 많은 사람들이 언니의 강한 포커스 능력이 언니의 병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늘 강렬한 이야기꾼이었던 래리도 “유미, 꼭 돌아와서 명상하는 법을 가르쳐줘. 나는 잘 안돼. 늘 존단 말야”하고 애교를 부렸고 한국의 투쟁 때 마다 나타났던 장님 에드는 누구보다 많은 돈을 기금으로 앞서서 내었다. 최근 다리에 이상이 온 케리는 머뭇목을 잡으며 언니의 병 투쟁이 얼마나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가를 말했고 “유미, 꼭 건강해서 돌아와.”하며 울음을 터트렸다.

언니가 없는 자리는 허전하고 혼란스럽다. 그리고 언니로 인해 하나로 모인 사람들로 따뜻하고 아름답다.

오디오를 통해 언니의 여전히 젼 체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남한 운동가들의 헌신, 애정으로 진단, 치료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꼭 뉴욕으로 돌아가고 한국의 자주를 위해 다시 싸울 것입니다. I miss You. I love You.”

언니, We love you. We miss you. 잘 쉬어.
지금은 언니 몸만 생각하고 꼭, 꼭 완쾌해 줘.

부산영화제

11회를 맞았다.

1회부터 단 사흘이라도, 매년 빠지지 않고 가보았고 3회째인 98년엔 3시간짜리 부산영화제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든 바 있지만 이번 부산 영화제엔 아무래도 가보지 못할 것 같다. 하긴 부산영화제라고 해봤자 가서 영화를 본 기억이라곤 손에 꼽을 만큼 적은 것도 사실이다. 영화제에 가서 영화를 본 기억이 적다라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부산영화제 하면, 나보다 먼저 취하는 바다와, 방과제에 오밀조밀 모여 있는 조개구이 포장마차와 자갈치시장의 꿈장어가 먼저 생각나는 걸 난들 어찌하랴. 사실 그동안 부산 영화제 방문 목적이 젓밥에만 관심이 있었긴 했지만 영화를 전혀 안 봤던 건 아니었다.

필자에게 있어서 부산영화제에서 영화를 고르는 기준은 몇 가지 되지 않는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개봉한 영화나 개봉할 영화는 보지 않는다. 물론, 저렴한 가격에 개봉 영화를 볼 수 있고 남들이 보기 전에 미리 볼 수 있단 장점이 있긴 하지만 한정된 시간 내에 여러 영화를 두루 섭렵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개봉영화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서울 돌아와서도 굳이 찾아서 보는 편도 아니지만...

두 번째 선정 기준은 저예산 독립 영화 쪽을 주로 선호한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돈 많이 들여 만든 영화는 자본의 논리에 좌우되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놓친 경우가 많다. 물론, 저예산 영화도 돈이 모자라 못한 얘기가 많을 수도 있지만... 영화제 소개책자에는 제작비가 나와 있지 않아 저예산 영화를 고르기에 쉽진 않지만 대체로 감으로 고르는 편이다.

세 번째, 약간은 사소한 이유겠지만 수영만에 위치한 야외 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선호 한다.개·폐막작도 야외 상영관에서 하지만 '좋은 영화들이 야외 상영관에서 많이 한다'는 얘기로 들으면 안 된다. 단지 탁 트인 하늘과 별들을 배경으로 스크린을 바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소한 이유라고 전제를 달았던 것이고 부산 영화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감상법이기 때문에 다소 흠더라도 야외 상영관을 즐겨 찾는다.

마지막 기준은 - 더 사소한 이유일 수 있지만 - 오후 상영 영화만 고른다. 술을 마시긴 내가 마시는데 취하기는 바다가 먼저 취한다는 시구가 저절로 떠오르는 부산의 밤바다! 조개를 구워 가며 청사포에서 즐기는 소주 한잔의 맛은 그만이다. 그러다 보면 큰 맘 먹고 구입한 - 사실 가격은 얼마 안 된다 - 오전 시간 영화표가 휴지 조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너무 주당 같은 얘기만 했는데 사실 이 소주 한잔의 맛을 돋우는 것은 나보다 먼저 취하는 바다 때문만은 아니다.

10월의, 그리고 부산 해운대라는, 시간과 장소가 제공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10월 이맘때가 되면 부산 곳곳에선 TV나 영화에서나 봄 직한 배우나 감독들을 간간히 볼 수 있다.

그들은 낮에는 Guest Visit이란, 이름의 '감독, 배우들과의 대화 시간'이나 PIFF(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광장에서 마련된 행사에 초청되어 팬이나 관객들과 만나고, 밤이 되면 삼삼오오 흩어져 술잔을 기울이며 영화에 대해 얘기 한다.

물론, 이렇게 영화를 만든 생산자와 소비자인 관객들과 만나기도 하지만 밤에는, 만든 이권 감상하는 이권 상관없이 한데 어우러져 그들의 영화에 대해 얘기 하고 토론한다.

필자는 그런 면에서 영화의 완성을, 모든 작업이 마쳐지고 프린트로 만들어져서 극장으로 올려지는 순간으로 보지 않고 영화를 감상한 후 영화에 대해 얘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본다.

극장에 가면 엔딩 크레딧이 오르기도 전에 극장문을 나서고 친구들에게 재미있다 또는 재미없다 등의 한마디 코멘트로 마침표를 찍고 말지만, 영화제에 가면 마지막 상영이 끝나고 극장의 불들이 다 꺼져도 바닷가에서, 또는 PIFF에서 영화는 계속 된다.

삼삼오오 모여, 푸른 가을 하늘이 제공하는, 나보다 먼저 취하는 바다가 제공하는 여유를 즐기며 한낮에 만났던 값진 영화들이 남긴 여운을 되새기는 맛은 영화제가 주는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2006 10월 12일

글 | 김균열 제이웍스 이사

서울, 인천, 대전, 부천, 안동, 전북

대중사업 줄이어

서울평통사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백 더하기 백’이라는 이름으로 1회 평화영화제를 개최했다. 경찰청의 과민반응으로 시작이 순조롭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애초의 취지를 잘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천평통사와 인천평통사는 22일과 29일, ‘DMZ 평화기행’을 다녀왔다. 평화활동가 이시우씨의 안내로 진행된 이번 기행은 평통사 회원들은 물론, 가족들과 친구, 직장동료들이 참가하여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대전충남평통사는 28일 군산미군기지와 새만금 갯벌과 철새 평화기행을 다녀왔다.

안동평통사는 11월 10일부터 5주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4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안동시민학교”을 ‘한반도와 미국, 미국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열 계획이다.

또 전북평통사는 11월 9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7회 평화학교’를 열 계획이다.

10차 SPI와 38차 SCM에

대응하기 위한 방미투쟁 펼쳐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평통사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10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대응하기 위해 2차례의 방미 투쟁을 펼쳤다. 자세한 소식은 평통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방미투쟁단은 또한 뉴욕 UN본부 앞에서 UN의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시위도 벌였다.

대북제재 강요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한 규탄 그림자 시위 펼쳐

북의 핵실험 이후 UN을 앞세운 미국의 대북제재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10월 19일 한국을 방문했다. UN 안보리의 제재와는 별도로 일본과 북한 선박 검색을 하기로 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가를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평통사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라이스가 이동하는 곳마다 집회 및 1인시위를 펼치며 ‘대북제재 중단,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주장하였다.

변연식 공동대표, 팩스 크리스티

아시아 태평양 회의 참가

변연식 공동대표는 9월 24일부터 태국에서 열린 4회 팩스 크리스티 아시아 태평양 국제회의에 참가하였다. 17개국 40명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 변연식 대표는 평택 미군기지 관련 선전물을 배포하고 한국의 평화와 평택 주민들의 투쟁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였다. 팩스 크리스티는 1945년 설립된 국제 기독교 평화 단체로 평통사는 참관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대추리 도두리는 지금 추수 투쟁 중

가을은 대추리 도두리 황새울에도 왔다. 9월 27일부터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을 추수투쟁을 하였다. 어느 시골마을처럼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싶지만, 어느해보다 적은 수확에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 없다.

평화를 원한다면 “대추리를 지켜라”

보신각 문화제 열려

10월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 평택 주민들과 1000인의 문예인들이 함께하는 30일간의 거리 문화제가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열리고 있다. 매일 매일의 일정은 다음 카페 황새우울 (cafe.daum.net/hwangsaewool)에서 볼 수 있다.

일본 AWC, 평통사 사무실 방문

9월 24일 평택 4차 평화대행진에 참가차 한국에 온 아시아 공동행동(AWC) 일본 연락회의 회원 10여명이 25일 평통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평통사 사무처와 함께 진행한 간담회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의 전망과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였다.